성숙한 민주 사회의 징검다리, 스웨덴의 성인교육

2016.12.26. | 문성근_흥사단 정책기획국장 / peopletopia@gmail.com

스웨덴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되었으며 민중은 제대로 교육 받을 기회조차 없었다. 그러나 1800년대 말부터 시작된 스웨덴의 민중운동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후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문화가 자리하기 시작했다. 100여년 전부터 스웨덴에 뿌리내린 성인교육은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숙한 민주사회로 이끄는 징검다리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난민을 포괄하는 스웨덴 통합사회로 나아가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국무총리비서실 주최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 방안 연구-스웨덴, 노르웨이" 연수(2016. 10. 5 ~ 10. 12)에 참여해 정리한 것으로, 그 중 한국의 복지 발전에 활용할만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본 글은 해외연수 보고 자료집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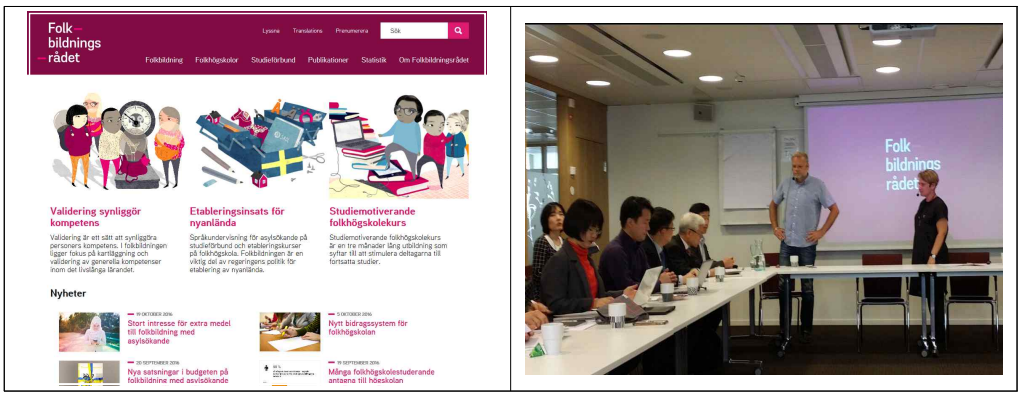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물론 이는 전 세계의 문제로 어느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로 초저출산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맞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7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급속히 줄어드는 '인구절벽'도 맞게 된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온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방문해 학습하게 된 이번 연수는 매우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The Swedish National Council of Adult Education; Folkbildningsrådet)[1]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책을 직접 담당

1)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 홈페이지는 www.folkbildning.se , 주소는 Box 380 74, 100 64 Stockholm (Rosenlundsgatan 50) 이다.

하는 기관은 아니었지만,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안은 조세, 고용, 연금, 수당, 교육, 주택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종합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수 있었던 동력은 사회적 합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학습하고 토론하며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숙한 시민의 역량은 바로 학습의 힘에서 나오고, 성인교육위원회가 시민의 학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다.

그림 1.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 방문



참고: 성인교육위원회 관계자와 해외 연수단 간담회 사진(2016.10. 6.)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성인교육에 대한 설명에 앞서 간략히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은 저출산 문제는 유럽 전체의 문제이긴 하나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이 2명에 가까운 것은 좋은 아동보육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급휴가, 각종 수당, 보육제도, 휴직 후 직장복귀 보장 등은 스웨덴 시민이 갖는 당연한 권리로 고용자는 피고용인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상식으로 자리 잡혀있다고 강조했다.

정규교육 시스템과 평생교육

스웨덴은 생후 1세까지는 부모가 보육을 책임지며, 다양한 휴가 · 수당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세~6세까지는 우리의 유치원에 해당하는 프리스쿨(preschool)에서 보육을 담당한다. 보육기관은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부모 부담이 약간 주어지며 부모 부담액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다. 7세~15세까지는 우리의 초등 · 중학교에 해당하는 의무학교(compulsory school)에서 교육을 담당한다. 2009~2010년 학기에 의무학교에 다닌 학생 수는 89만 2000명이다. 16세~19세까지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등학교(secondary school)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는 의무교육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는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인지 39만 5000명(2009/2010년 학기)이 등록했다. 이를 통해 본다면 5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대학생 수는 40만 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는 성인교육 시스템이 그 징검다리가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50대에도 대학에 가는 성인이 많은 것을 보면, 대학이 단지 학위를 받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평생교육이나 자기 성장의 공간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대학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새로운 학습동기가 있는 성인들에게 학습할 기회를 계속 마련해 주는 것이 스웨덴 성인교육의 취지이다.

스웨덴 성인교육(Folkbildning)의 역사

스웨덴 성인교육은 'Folkbildning'이라는 용어를 쓴다. 'folk'는 영어로 'people'을, 'bildning'은 'enlightenment'를 의미한다. 'Folkbildning'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보적, 비정규적, 대중적, 자발적 성인 학습·교육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스웨덴) 성인교육'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스웨덴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되었으며 민중은 제대로 교육 받을 기회가 없었다. 당시 교육은 엘리트의 전유물이었다. 1800년대 말부터 스웨덴에서는 노동운동, 독립교회운동, 금주운동 등 민중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이들 민중운동은 공통적으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시민학교(folk high school)는 1860대년부터 생겨났으며, 학습동아리(study circle)는 1890년대에 태동했다. 민중은 사회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을 핵심목표로 성인교육에 참여했다.

이와 같이 스웨덴 성인교육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민중운동에서 출발되었으며,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한편 도덕적·미적·지적 성장도 강조했다. 정부는 독립적이고 자발적 성인교육이 시민의 역량을 강화했고 사회발전과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했다고 인식하면서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성인도 스스로가 다시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고용주는 이를 지원해야 할 정도로 사회 전체가 성인교육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은퇴자나 고령자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고 안정적인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평생교육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축적되어 현재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인교육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스웨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성적은 그리 높지 않다. 이는 경쟁이나 성취보다는 협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스웨덴 학교교육의 풍토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대신 토론하고 참여하는 평생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웨덴 성인의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국체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은 최상위권이지만, 학업 동기, 문제해결 능력, 협력하는 능력은 하위권인 우리의 학교 교육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국제성인역량조사 성적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성인교육을 포함한 교육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성인교육의 제도적 정착

스웨덴 교육부는 1991년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담당하던 성인교육 업무를 '성인교육위원회(Folkbildningsrådet)'라는 비영리단체를 신설하여 이관했다. 또한 성인교육위원회가 원활하게 성인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은 해에 '성인교육에 대한 정부 보조금 시행령(Decree on Government Subsidies to Folkbildning)'을 제정했다.

스웨덴 의회(The Riksdag)는 성인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기반으로 2005년에 '성인교육법안(Folkbildning bill 2005/06:192)'을 통과시키면서 국가가 성인교육을 지원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공식화했다.

- 민주주의 강화 및 발전에 기여
- 시민의 현재 삶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함
-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과 문화 수준을 향상
-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

한편 1991년 제정된 '정부 보조금 시행령'을 2007년에 개정하면서 성인교육 예산은 시민대학(folk high school), 학습협회(study association), 시민대학 내 학

생조직에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정부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1. 일련의 공통된 근본 가치(fundamental values) : 만민의 평등한 가치와 양성 평등 2. 다문화 사회의 도전 3. 인구통계학적 도전 4. 평생학습 5. 문화 6.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과 기회 7. 공중보건, 지속가능한 발전, 글로벌 정의

스웨덴 교육부는 2010년에 '신교육법(The New Education Act)'을, 2011년에는 '성인교육법령(The Ordinance of Adult Education)'을 공포하고 발효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1940년대부터 부분적으로 수용해 오던 성인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성인교육에 약 65억SEK(스웨덴 크로나, 약 8300억 원)을 지원했다(2009년 기준).

이렇게 성인교육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린 과정에는 스웨덴 국민은 전 생애에 걸쳐서 배움의 기회를 보장 받아야한다는 철학이 깊이 깔려있다. 스웨덴 시민들은 학습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상호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의 발전과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

성인교육위원회는 1991년 교육부 개혁과정에서 설립되었다. 이는 스웨덴 정부와 의회가 권한을 위임한 준정부 성격의 비영리단체로,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할 대상을 선정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고 보조금을 사용했는지 조사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한다. 이 과정에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대신 성인교육위원회는 정부에 매년 연례보고서와 예산보고를 제출한다. 정부는 성인교육위원회가 적은 예산으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며 신임한다고 한다.

성인교육위원회는 성인교육을 실제 수행하는 다음 3개 회원단체로 구성된다.

1. 10개의 학습협회로 구성된 전국학습협회연맹
   (National Federation of Study Association)
2. 시민대학대중운동을 수행하는 이익단체
   (Interest Organization for Popular Movement Folk High School)
3. 지자체협회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y and Region)

이 3개의 회원단체가 임기 2년의 위원회 이사를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한다. 주로 시민단체, 민중단체로 구성된 위의 2개 단체와 성인교육에 적극적인 지자체협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현장과 밀접하게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행정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은 스톡홀름에 있으며 약 2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성인교육 넷(Folkbildning Net), 시민대학 정보서비스(Folk High School Information Service), 성인교육-적극적 시민성을 위한 학습(Folkbildning-Learning for Active Citizenship), 학생권리 시민대학위원회(Folk High School Council of Student Rights)라는 4개의 산하기관이 있다.

성인교육위원회가 지원하는 성인교육 대상은 크게 시민대학(folk high school)과 학습협회(study association)로 구분된다. 시민대학과 학습협회는 모두 1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스웨덴 특유의 학습조직이며, 자발적, 대중적, 자율적 운영을 특징으로 한다. 이 단체들이 수행하는 교육은 비정규(non formal) 교육 과정에 해당한다.

현재 시민대학은 153개, 학습협회는 10개의 단체가 있는데 대부분 시민단체 또는 대중운동과 연계되어 있다. 학습 분야는 특정 영역에 집중되지 않고, 시민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폭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운영은 토론, 문제의식, 그룹토의를 중시하고, 리더가 이끌기 보다는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시민대학(folk high school; Folkhögskolor)

1860년대부터 민중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시민대학은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제대로 고등교육을 이수 받지 못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현재 약 153개의 시민대학이 있는데, 시민사회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학교가 약 70%, 지자체

가 운영하는 학교는 약 30%이다. 시민대학은 무료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지원비도 지급한다.

시민대학은 장기 과정과 단기 과정, 이민자를 위한 과정 등으로 운영된다. 장기 과정(long-term course)은 15일부터 4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과정으로 개설되는데,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으로 구분된다.

장기 일반과정(long-term general course)은 고등학교(upper-secondary school) 또는 대학을 진학하고 싶거나, 수준 높은 연구를 하려는 성인을 위한 과정이다. 즉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입하고자 하거나 연구를 하려는 성인을 위해 마련된 과정이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주어진다. 의무교육(초중등 수준)만 이수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은 성인이 되어서도 정규교육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주로 스웨덴어, 외국어, 역사 등 대학을 가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학에 시민대학 출신을 위한 입학 정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장기 특별과정(long-term special course)은 특정 주제영역에 집중된다. 언론인,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강사, 미용사, 합창단원, 번역가, 치료 보조사 등의 과정이 있는데, 주로 직업훈련을 위한 과정이다. 빈민을 위한 기술자 양성 과정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시민대학은 공공 고용센터(Public Employment Service)와도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이후에 취업하기에도 좋다.

단기 과정(short-term course)은 반나절에서부터 3주에 이르는 기간에 개설되는 과정인데, 미디어, 음악, 공작, 연극, 외국어, 여행, 예방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가 운영된다. 이외에도 이민자가 스웨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도 운영된다.

시민대학에서 교육(pedagogy) 방식은 적은 규모에 응집력 있는 학습그룹으로 진행하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분야를 조사하여 운영한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장기과정에 2만 8000명, 단기과정에 11만 4000명, 문화프로그램에 23만 명이 참여했다. 이 같은 다양한 시민대학 교육과정은 사회 발전에 기반이 되고, 시민의 성숙한 삶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학습협회(study association)

학습협회는 1890년대부터 민중 진영에서 자발적으로 전개한 학습동아리(study

circle)를 기반으로 한다. 시민들이 독립적으로 참여하며 운영하던 학습동아리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 정부의 재정보조가 입법화되면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학습협회의 활동은 크게 학습동아리(study circle), 문화프로그램, 기타 성인교육 활동(other folkbildning activisties)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자율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운영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① 평등과 자유, ② 사회변혁, ③ 협동심과 동료애, ④ 운영의 자유와 목표설정의 권리, ⑤ 연속성과 계속성, ⑥ 적극적 참여, ⑦ 학습자료 준비, ⑧ 변화와 행동 등이 주요하다.

학습협회는 민중운동을 기반으로 한 총 10개의 학습단체로 구성되며, 학습단체에는 전국적으로 372개 이상의 회원단체와 협력기관이 있다(2010년 기준). 이들 단체, 기관을 통해 매년 약 2만 7000여개의 학습동아리가 개설되며 약 100여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다. 2개 이상의 학습동아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적 참가자 수는 250만 명에 육박한다.

학습동아리는 리더를 포함해 최소 3명 이상이어야 성립되는데, 평균 동아리 회원 수는 7명이다. 동아리는 스스로 정한 활동기간에 최소 3번의 모임을 가져야 하며, 합산해서 총 9시간 이상 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습동아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야(2010년 학습시간 기준)는 음악, 연극, 무용으로 전체 학습시간의 45%를 차지한다. 이어 언어, 역사 등 인문학이 14%, 사회과학이 6%를 차지하며, 그 외 요리, 여행, 운동, 예방건강, 농업, 조경, 낚시 등에 관심을 보인다.

또한 학습협회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중 48%가 문화 프로그램이다. 학습협회가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은 강좌(36%), 노래·음악(35%), 비교문화(cross-cultural; 8%), 연극(5%), 영화·사진·일러스트(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화행사는 연간 약 30만 건에 이르는데 참가자는 1650만 명에 달한다. 스웨덴 인구가 약 96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이다.

이 밖에 학습단체와 학습동아리는 시민단체나 성인교육 기관과 연계되어 담당 활동가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질의응답

- 질의1 : 성인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은 제대로 유지되나요?
  최근에 생긴 극우 성향의 1개 정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시민교육에 대한 의견이 일치한다. 즉 정부는 성인교육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상식화 되었다. 물론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25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자부한다.

- 질의2 : 성인교육위원회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매년 이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성인교육은 원래 교육부의 권한이었으나, 국가의 역할을 대폭 줄이고 지자체나 민간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교육개혁 과정에서 분리되어 독립기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또한 학습자나 참여자들이 원하는 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립성이 유지된다고 본다.

- 질의3 : 최근 성인교육 활동 중 대표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2015년에 18만 명의 난민이 스웨덴으로 왔다. 그 중 약 50%가 스웨덴에 정착하였다. 이들이 스웨덴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난민의 사회정착 정책 중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성인교육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았다. 그래서 2016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았다. 시민교육이 동일한 재원으로 가장 높은 사회적, 교육적 효과를 거둔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 같다.

- 질의4 : 성인 교육과 학습에 대한 평가와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학습자 명단, 학습 내용 등 자료를 분석하면서 제 목적에 충실한 활동을 했는지 평가한다. 또한 방문 조사, 자체 평가보고서 검토 등을 통해 관리한다.

- 질의 5 : 성인교육의 정치사회적 기능은 무엇인가요?
  시민대학, 학습동아리에 한번 참여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육과 학습 활동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는 새로운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정치사회적으로 성숙해진다. 성인교육은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형성과 연대를 중시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학습동아리와 시민대학은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연계된, 즉 조직화된 시민은 문제가 없으나, 여기서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은 극우화될 우려가 크다. 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지가 고민이다.

● 질의6 : 은퇴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은퇴자를 위한 교육이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전문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주요한 역할은 아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정년 연령을 63~67세에서 65~69세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은퇴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회참여 분야는 자원봉사인데, 이민자와 난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일을 선호한다. 주로 이들을 위한 스웨덴어 교육, 사회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소그룹을 형성하여 협력을 이끄는 일 등을 한다.

● 질의7 : 위원회 예산은 어느 부처가 담당하고 있으며, 지원 추이는 어떤가요?

위원회 예산은 교육부 담당이다. 증가하는 이민자, 난민, 실업자 지원과 교육의 효율성을 인정받으면서 지원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 질의8 : 난민,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도 있나요?

있다. 하지만 극우 성향의 사람들은 난민과 이민자들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는데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긴 하다.

시민의 자발적 학습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연수단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주제로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방문했다.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 방문을 통해서 교육과 학습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을 일부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자발적인 시민학습이 시민의 역량을 강화시켜 성숙한 민주사회와 소통하고 대화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같은 공적 지원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인 셈이다.

스웨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교육은 시민사회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하며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필요와 희망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며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참여하는 시민은 토론과 참여, 자발성, 적극성, 상호존중의 자세를 가져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를 방문하면서 저출산과 고령화 해법과 연관해 얻은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결혼을 앞둔 여성, 출산을 한 여성이나 은퇴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 ·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자원봉사, 고용센터 등과 연계해 이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새로운 일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풍성해질 때 출산과 은퇴의 삶이 사회나 경제생활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으로 난민과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듯이, 우리 사회에는 탈북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조선족, 고려인들도 국내에 많이 들어오면서 국내의 어느 지역에서는 큰 갈등이 일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 정부가 난민과 이민자가 사회에 정착하는데 성인교육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올바르게 정착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우리 시민들도 이들을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학습해야 한다. 교육과 학습을 통해 사회적으로 화합한다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되고 보다 발전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인구 감소 문제 등을 일정 부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2016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6년 12월 26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송민정
고용,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연구팀
주거	1/15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과 '소득'에 있다	장경호
주거	1/29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강세진
복지	2/1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노동	2/5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로 몰리는 인터넷 매체, 본질은 '여론 통제'다	김시연
잇:북	2/18	2016 전망보고서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세진
복지	3/14	1인 가구, '전 연령'의 문제다	최정은
주거	3/18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① :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황서연 진남영
주거	4/4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염탐하기	황서연 진남영
사회적경제	4/11	민주주의의 풀뿌리, 마을공론의 형성 과정	강세진
주거	4/15	개발이익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권순형
청년	4/18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송민정
주거	4/22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③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	황서연 진남영
경제	4/29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정승일
청년	5/2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최정은
청년	5/19	시골청년 상경분투기	강세진
노동	6/14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 및 수혜 현황	송민정
청년	6/20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	새사연 노동연구팀
사회	7/4	가계경제, 2009년 경제위기와 닮았다	최정은
청년	7/22	나는 생활하는가, 생존하는가?	새사연 노동연구팀
청년	8/16	홀가분한 후퇴, 반쪽짜리 지방생활	송민정
주거	8/23	영국 임차인관리조직의 혁신사례 : 런던 브라우닝 EMA(Estate Management Association)	황서연
사회	8/29	비영리단체의 정의 (Defining NPIs)	강세진
복지	9/5	쥐어짜는 재정, 개인 부담 늘고 복지 후퇴	최정은
경제	9/12	가계부채, 현재 부실화 막을 방안 세 가지	송종운
경제	9/19	[한국 경제동향①] 장기불황, 양극화, 낙수효과 소멸	김선태
경제	10/14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① 대한민국 불평등 시작의 원년, 1995년	정승일
경제	10/21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②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정승일
사회적경제	10/24	마을에서 읽는 관계 줄거리	강세진
노동	10/31	여성노동자 임금실태조사	새사연 노동연구팀
경제	11/4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③ '한류 드라마'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주의	정승일

경제	11/7	삼부토건 사례를 통해 본 기업 및 금융민주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 과제 ①	김영석
경제	11/11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④ ‘돈이 돈 버는’ 재테크 자본주의	정승일
복지	11/14	시민이 스스로 하는 복지, 스웨덴의 시민봉사단체(Frivilligcentraler)	최정은
경제	11/18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⑤ 재산소득, 상위 1%가 ‘싹쓸이’	정승일
경제	11/21	삼부토건 사례를 통해 본 기업 및 금융민주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 과제 ②	김영석
경제	11/25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⑥ 보수는 왜 박정희를 배신하는가	정승일
마을	11/29	마을계정 : 관계 줄거리의 정산	강세진
경제	12/5	샌더스의 꿈, 우리의 꿈	정승일
경제	12/9	‘진짜’ 경제민주화로 ① 재벌만이 아니라 시장 자본주의가 문제	정승일
마을	12/12	수치에서 내용으로, 사회적가치평가의 방향전환	최정은
경제	12/16	‘진짜’ 경제민주화로 ②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두 배, 언제부터?	정승일
경제	12/19	2016년 가계부채 특징과 공적 채무조정의 곤란	송종운
경제	12/23	진짜’ 경제민주화로 ③ 새 담론의 핵심, ‘노동권 강화와 소득 인상’	정승일
복지	12/26	성숙한 민주 사회의 징검다리, 스웨덴의 성인교육	문성근